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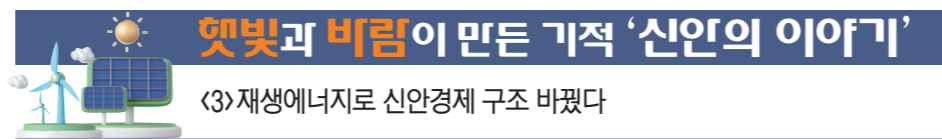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신안 라마다호텔&싸리리조트에서 국내 최초 민간부분 96MW 규모의 전남해상풍력 준공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신안군청

# 햇빛·바람 연금서 일자리·인구까지...이익공유 성장모델 정착

신안군은 에너지 생산과 공급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고 소득의 흐름을 재편하는 핵심 축으로 작동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던 기존 구조를 깨고, 이를 지역 내 소득과 공공서비스로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익 공유 방식도 자리 잡으며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햇빛과 바람으로 만들어진 수익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며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흐름을 살펴본다.



## 주민과 이익공유 전국 최초 '햇빛연금'...지역소득 선순환 태양광 이어 8.2GW 해상풍력 추진...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고 있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공공서비스 집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부 용역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업체 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내에서 에너지 수익이 소비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햇빛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분석에 따르면 햇빛연금 220억원, 지급을 통해 생산유발 378억원, 부가가치 184억원, 고용 678명, 소비유발 352억원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금 지급 이후 관내 하나마트 매출이 30.3% 증가하는 등 소비 유입이 확인됐고, 자영업 매출과 고용 지표도 개선됐다.



2021년 3월 신안군 안좌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신안군청

### △에너지 수익 지역환원 구조 구축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수익의 지역환원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발전 수익이 외부로 빠져 나갔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공공서비스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수익이 특정 주체에만 집중되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주민 참여형 모델을 확대해 주민과 군이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읍·면 단위 주민에게 나눠 지급하고 있다.

배분방식도 구체화했다.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100m 이내 주민은 최대 4배, 500m는 3배, 1km는 2배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영유아 등 취약계층 요소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

특히 군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사와 협약을 통해 재원을 확보, 마을 숙원사업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투입되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정착

신안군은 주민참여형 협동조합과 지분 참여를 기반으로 발전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이익공유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연금형 배당 방식으로 정례화하며 제도화. 지난 2018년 시행해 2021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을 지급했다.

국내 최초 도입한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신안군의 이익공유제는 직접 투자와 협동조합·채권·펀드 등 간접 참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주민 참여가 이뤄질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부여되며, 태양광 0.2, 해상풍력 0.3 수준의 우대가 적용된다. 이 같은 구조를 기반으로 발생한 수익은 '햇빛·바람연금' 형태로 주민에게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다. '햇빛연금'은 이미 주민 소득으로 자리 잡았

며, '바람연금'도 해상풍력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 민간자본이 준공한 자은도 96M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이익공유제가 적용되고 있다. 향후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본격화될 경우 주민 소득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신안군은 8.2GW 규모(지주식)의 신안 해상풍력단지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3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주민 소득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주민 수용성 개선에도 효과로 증명되고 있다. 실제 과거 사례로 보면 입지 갈등과 주민 반발이 주요 변수였지만 주민이 투자자이자 수혜자로 참여하면서 갈등 구조가 최소화되고 사업 추진도 원활하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주민 소득과 정주 여건을 동시에 강화하며 인구 유입을 견인하는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

△해상풍력·태양광, 단기·상시 일자리 동시 창출 신안군은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축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지주식 8.2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통해 약 48조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총 11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해상풍력은 건설 단계에서 토목, 해상 구조물 설치, 전기 설비, 운송 등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며 단기 고용이 집중된다. 이후 운영 단계에서는 설비 유지관리(O&M), 안전관리, 데이터 모니터링 등 기술 중심의 상시 일자리로 전환되며,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인 고용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진 중인 신안 해상풍력 사업은 고정식 8.2GW 규모가 2029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부유식 10GW 사업의 조기 착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양광은 주민참여형과 분산형 발전소를 중심으로 운영·유지관리, 설비 점검, 계통 연계 관리, 발전 수익 정산 업무 등에서 상시 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소규모 발전소가 운영되면서 특정 시점의 단기 고용이 아닌 일상적인 관리 인력 중심의 고용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전기·기계·에너지 시스템 관련 기술 인력 유입이 확대되면서 청년층과 전문인력 유입이 늘고, 지역 정착과 연계된 고용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다만 핵심 기술 인력과 운영 전문 기업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점은 풀어야 될 과제다. 따라서 신안군은 지역 인력이 고부가가치 직무 진입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역 일자리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고 해상풍력 대규모 고용과 태양광 상시 고용을 병행해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 △재생에너지 기반 인구 유입 가속

지방소멸의 위기속에서도 신안군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2026년 3월 기준 인구는 4만2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3350여명 증가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소득과 정부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신안군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태양광·해상풍력 수익과 연계, 주민소득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주민 보상과 협동조합 배당 형태로 지급되며 농어업 소득 외 추가 소득원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햇빛·바람연금'의 정기적 지급(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며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있다.

실제 인구 흐름도 변화하고 있다.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신안 인구는 재생에너지 소득이 본격화된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3년 증가세로 돌아선데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인구 증가가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매출이 증가하고 유동 인구 확대와 체감 경기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 변화도 뚜렷한데 고령층은 연금형 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청년층은 에너지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정착을 높이고 있다. 신안군은 귀농·귀촌 유입부터 정착·소득·정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은 전력 생산을 넘어 수익이 지역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며 "태양광과 해상풍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 투자형 방식과 연계해 지역 내 소득 기반으로 정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 수익이 소비와 재투자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너지 산업을 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2025년 10월 자은면 주민들이 국내 최초 바람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사진제공=신안군청